

# 검찰 78년 역사 마침표...광주 공소청·중수청 첫발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 첫날인 2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광주지방공소청이 별도의 출범식 없이 조용히 업무를 시작했다.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 중흥동에 새 동지를 틀고 첫 고발 사건을 접수했고, 광주지방공소청은 기존 광주지검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첫발을 뒀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찾은 광주중수청 청사에는 일찍부터 불이 켜졌다. 사무용품은 실은 차량이 들어왔고, 다이어리와 서류철 등을 챙긴 수사관들이 하나둘 출근했다.

새 청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탓에 사무실 위치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직원들

중수청 1호 광산구 공공계약 비리...접수증 양식은 미비  
공소청은 청사·인력 등 유지...수사·기소 분리 체계 가동

도 눈에 띄었다. 기존 공무원증으로 출입 인증이 되지 않는 탓에 기존에 사용했던 명찰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출신인 한 수사관은 “출범하는 날이라 조금 설레기는 한다”며 “이름과 간판은 바뀌었지만 해야 할 일은 같으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 업무 시작과 함께 첫 민원인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 민원인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광산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중수청을 찾았다.

이 사건은 광산구가 약 31억원을 들여 추진한 공동주택 재할양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맡아줬다는 의혹이다.

중수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출범 첫날인 만큼 미숙한 모습도 드러났다. 고발장을 제출한 민원인이 접수 확인증을 요구했지만, 담당 직원은 관련 양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안내했다.

민원실 관계자는 “서식이 아직 준비되



지난 2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1호 고발장이 접수되는 모습.

지 않아 사본으로 접수 사실을 확인해 드리고 있다”며 “서식이 마련되면 팩스나 문자 등으로 접수증을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중수청은 정원 240명 가운데 140명의 현원으로 출범했다. 검찰에서 이동한

인력은 검사 1~2명과 수사관 약 50명 규모로 알려졌다.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도 갖추지 못해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산 시스템 역시 이날 사건 이첩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됐으며,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 추가 개통될 예정이다.

반면 광주지방공소청의 첫날 풍경은 기존 광주지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남광주 동구 자산동 청사에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직원들이 평소처럼 출근했다. 정문 석판과 기관기는 공소청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건물과 사무공간, 대부분의 인력은 그대로였다.

청사 곳곳에는 검찰청 시절 흔적도 남아 있었다. 광주지검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한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기존 자리에서 업무를 이어갔다.

고경순 전 광주고검장과 김종우 전 광주지검장도 각각 광주광역공소청장과 광주지방공소청장으로 자리를 이어갔다.

공소청은 이날 별도의 출범식 없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이날부터 공소청 민원실에서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직접 접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 사건에 대한 90일간의 보관수사유예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업무가 하루 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니다. 공소청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대병원 병상당 전문의  
2.23명...빅5 절반 수준 불과

전남대학교병원의 전문의 수가 수도권 빅5 병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수도권 빅5 대형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평균 4.3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인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 4.5명, 서울성모병원 4.35명, 서울아산병원 4.19명, 세브란스병원 3.8명 순이었다.

반면, 지역 국립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평균 2.37명이었다.

국립대병원별로는 경상국립대병원이 2.0명으로 적었고, 전북대병원 2.13명, 충남대병원 2.18명, 전남대병원 2.23명, 충북대병원 2.33명 순으로 확인됐다.

또 9곳의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 수와 전문의 수를 모두 합쳐도 수도권 빅5보다 부족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 수는 총 8123개로 빅5(9330개)보다 적었고, 전문의 수는 총 1904명으로 빅5(3985명)의 47.8% 수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이 계속될 경우 교수진 고령화, 당직 부담 가중 등으로 기존 인력 이탈이 심화하며 필수 의료 제공 기반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지구촌 맛과 맛의 축제 '제3회 광산세계야시장' 휴일을 맞아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산구 월곡동 목련로 일원에서 열린 '제3회 광산세계야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영농폐기물 ‘폐비닐’ 최다

최근 3년간 4만7245t...폐농약용기도 1235만개

전남광주지역에서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가운데 폐비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농약용기도 3년간 1200만개 넘게 배출돼 농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수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

은 ‘2022~2024년 영농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남광주 지역 영농폐비닐은 3년간 4만7245t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만4651t), 부산·울산·경남(3만9130t), 대전·세종·충남(3만6653t), 전북(3만5232t) 등을 웃도는 규모다.

폐농약용기도 적지 않았다. 전남광주에

서 발생한 폐농약용기는 3년간 1235만 2898개로, 대구·경북(1823만3747개)에 이어 많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2022~2024년 3년간 총 2억3523만823개가 배출됐다. 특히 2024년 발생량은 8575만 8471개로, 2023년 7382만2258개보다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을 경우 불법 소각이나 방치·매립으로 이어져 환경오염과 산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MZ조폭’ 등 보험사기 일당 11명 송치

고의사고 11차례·8000만원 편취 혐의

차선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MZ조폭’ 등 일당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목포지역 조폭 행동대원 A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목포시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8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위반 차량 등을 골라 일부러 충돌한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이후 실제보다 상해를 과장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진료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A씨는 목포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가 반복되는

사고 정황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꼬리가 잡혔다.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고들이 반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

또 피의자들의 허위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핵심 피의자인 A씨 등 4명의 보험금 분배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면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29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